

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취!



지부교섭 속보

4호

2024.05.10(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4차 지부교섭_ 질의응답 ② :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금속산업최저임금, 안전보건확보 의무]

안전은 사업주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



두 번째 질의응답 진행

4차 지부교섭에서 두 번째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5월 9일(목) 한국JCC에서 열린 지부교섭에서는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11가지 질문을 쏟아낸 사측 교섭위원들은 차기 교섭에서도 질의응답을 한차례 더 하자고 제안했다.

안전보건은 사업주의 의무!

특히 사측 교섭위원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많이 질문했다.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자는 요구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 안전보건확보는 사업주의 의무이

자, 노동자의 권리이다. 안전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비는 과할수록 좋다고 했다. 사업주가 의무를 다했을 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요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길 바란다

2차례 질의응답에서 벌써 19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사측 교섭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한차례 더 하자고 제안했다. 질의응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다. 얼마나 진정성있게 고민했는지는 질의응답 이후 사측의 제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

* 차기교섭 : 5/16(목) 14:30 코스모링크

4차 교섭 속기록

한온 일방 매각 추진 매우 유감!

노 : 지부, 지회 교섭 중시한다고 했던 사업장에서 매각 관련 협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알고 있다. 상당히 유감이다. 하루 빨리 지회랑 소통해서 현장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해달라.

Q1.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요구한 배경 궁금하다. 불이익 사례가 있었나?

: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정주노동자 모든 노동자 간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관점이다. 그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이주노동자다.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기 위한 조치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고용 위험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 물론 지부 내 사업장에서 차별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진 않다. 지금까지처럼 올바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의 요구다.

Q2. 도급직에게 동일한 근무복을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

: 똑같은 작업복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작업복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Q3. 금속산업최저임금 기준시간이 226시간인데 기준시간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적용하나?

: 통상시급과 월 통상임금,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금액을 논의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다.

Q4.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대우도 가능한 것인지?

: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사내하청이나 협력업체들도 적용하도록 권고하자는 것이다.

Q5. 안전보건관리자 평가를 산보위 하는 이유는?

: 시행령에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 관리하도록

한다. 사업주만 오로지 인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다.

Q6. 산보위에 사업주가 불참한 상황에서 의결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 핵심은 노사가 같이 평가하자는 것이다. 교섭 자리도 사업주가 안들어와도 위임 받아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산보위도 사업주 위임 받은 사측 위원이 권한 갖고 평가할 수 있다.

Q7.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하나?

: 미달한다면 산보위 등 통해서 개선방안을 노사가 논의해야한다. 개인에 대한 인사평가만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자의 권한과 예산이 잘 갖춰져있는지 구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평가하자는 것이다.

Q8.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무조건 배치하는 것인지?

: 시행령에 나온 내용에 따라 배치하면 된다.

Q9. 안전관리기관에 위탁도 할 수 있나?

: 관련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대신 위탁기관 선정은 노사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Q10.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권한은 너무 폭넓은 권한 행사 아닌지?

: 산안법 상 작업중지 주체는 사업주, 노동부, 노동자이다. 사업주에게만 있는 예외적 권리 아니다. 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으로 가장 밀접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사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중지권이 부여되는 것은 필수적 사항이다.

Q11. 경미한 산업재해 범위가 어떻게 되나?

: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면 중대재해로 발전된 경우가 많았다. 경중을 떠나서 모든 재발방지 대책은 필요하다. 모든 산업재해를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